

GDP와 내 삶의 행복

2009.10.13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목 차

1. 정보사회, 통계, 그리고 정책
2. GDP는 실질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3.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을 위한 위원회'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http://saesayon.org>

1. 정보사회, 통계, 그리고 정책

오늘도 우리는 통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GDP, 물가, 실업률 등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거시경제 지표들은 TV나 신문을 통해 매일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주가 등 각종 국내외 금융 지표들도 시시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통계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성과와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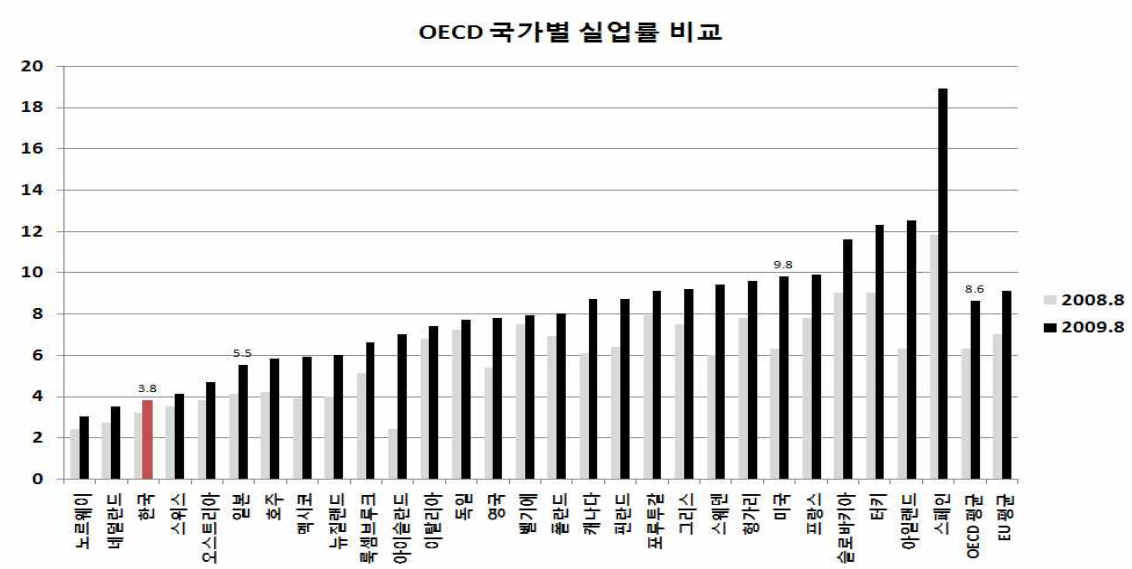
그리고 통계지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가 갈수록 복잡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필요로 하지 않았던 세세한 정보의 전달과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제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통계지표의 이해력이 또한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통계적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보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측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점을 지닌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계지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소통’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경제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집합적 요구가 ‘고용’ 상태 개선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실업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통화 및 재정정책을 책임지는 정책당국의 의사결정은 그릇되고, 국민과 정권은 서로 다른 말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2008년 8월 기준, OECD의 평균 실업률은 8.6퍼센트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미국의 실업률(9월)은 9.8퍼센트, EU 평균은 9.1퍼센트로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 실업률은 3.8퍼센트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계상으로는 노르웨이(3.0퍼센트, 7월), 네덜란드(3.5퍼센트) 다음으로 OECD 30개국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고용시장을 자랑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OECD 평균 실업률이 2.3퍼센트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6퍼센트 상승에 그쳐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실업률이 실제 고용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되었다.¹⁾

1) 현 고용 통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과 고용통계 개혁 방향’(이상동, 09/09/22)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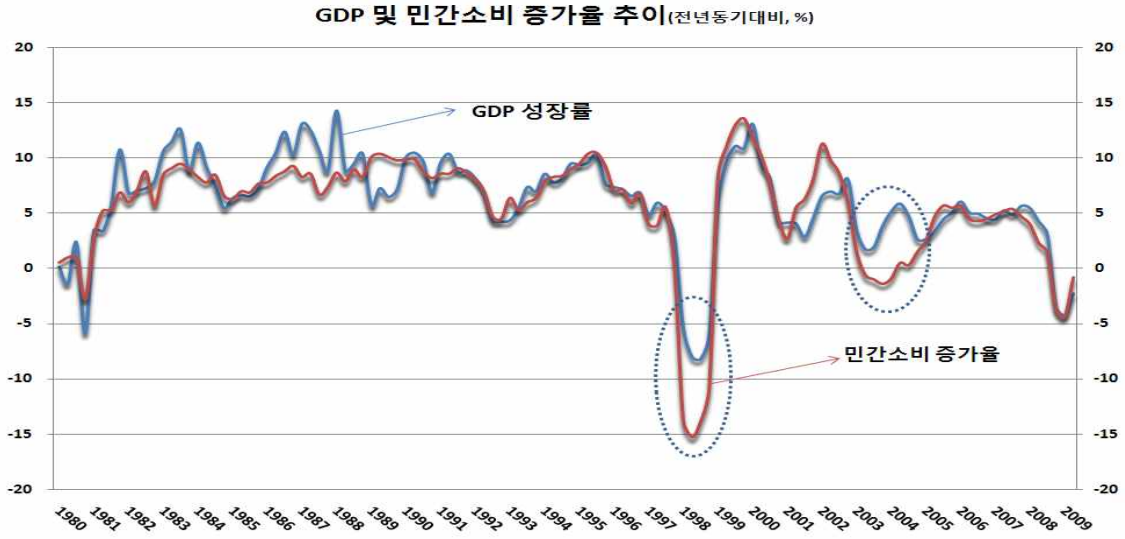
통계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보전달과 의사결정에 실업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경제성장률, 즉 GDP 통계다.

‘경제성장’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학이 답해야 할 근본 물음 중 하나다. 경제성장이란 경제활동의 결과인 산출물, 즉 ‘파이’가 커지는 것을 뜻한다. 만약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진행했다면, 높은 경제성장률은 ‘생산성’이 증가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표다. 물론 아무리 파이가 커져도 나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만 말이다.

따라서 아담스미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어떻게 분배해야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주로 탐구하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마치 이분법인 것처럼 취급되지만, 경제를 재생산 또는 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과 분배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2. GDP는 실질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통계지표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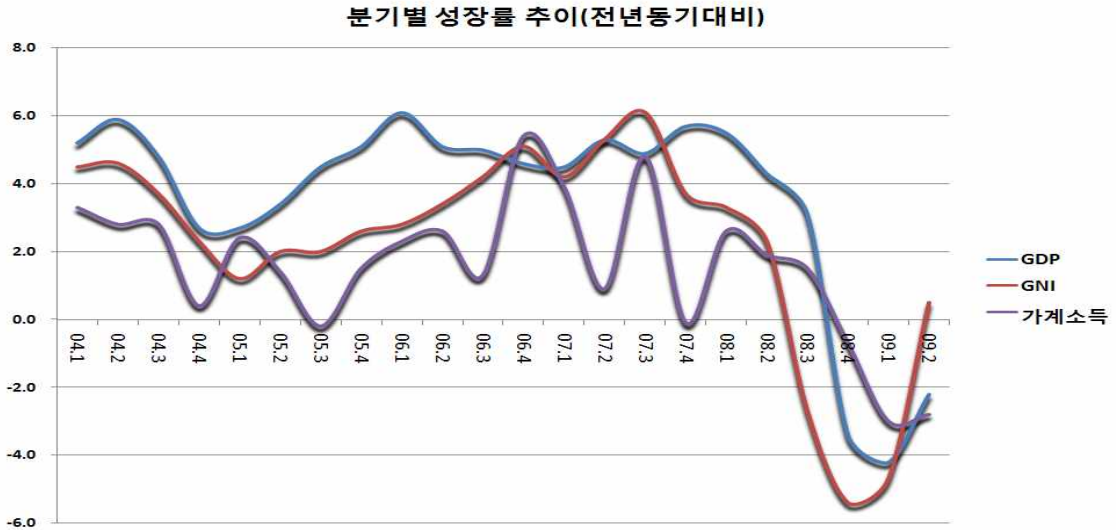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대표적 국민소득 지표인 GDP와 민간소비의 최근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특징적인 현상이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당시 GDP보다 민간소비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발달로 부채를 통한 소비 증가가 용이해졌고, 이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위기의 정도를 더 잘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교하면, 80년대 GDP는 연평균 7.7퍼센트, 90년대는 6.3퍼센트, 그리고 2000년대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연평균 5.1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경제학에서는 ‘7퍼센트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7퍼센트 성장률을 보이면 10년 후에는 두 배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80년대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90년대에도 거의 두 배 만큼 실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성장률이 5.1퍼센트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매년 5퍼센트만큼만 기록해도 10년 후에는 63퍼센트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GDP가 소득과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라면, 현재 우리는 95년보다 두 배 정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은 별 차이가 없고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현상을 측정하는 객관적 통계지표와 구성원이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통계적 ‘개념’이 올바르지만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기술의 발달로 ‘측정’ 과정의 기술적 문제들은 갈수록 해결되고 있다. 측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념상의 오류다. 1930년대 처음 개발되었을 때부터 과연 GDP가

사회진보나 경제번영을 측정하는 올바른 지표인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양극화로 대변되는 소득 분배의 변화는 이러한 의문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불평등이 증가하면 평균소득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내 삶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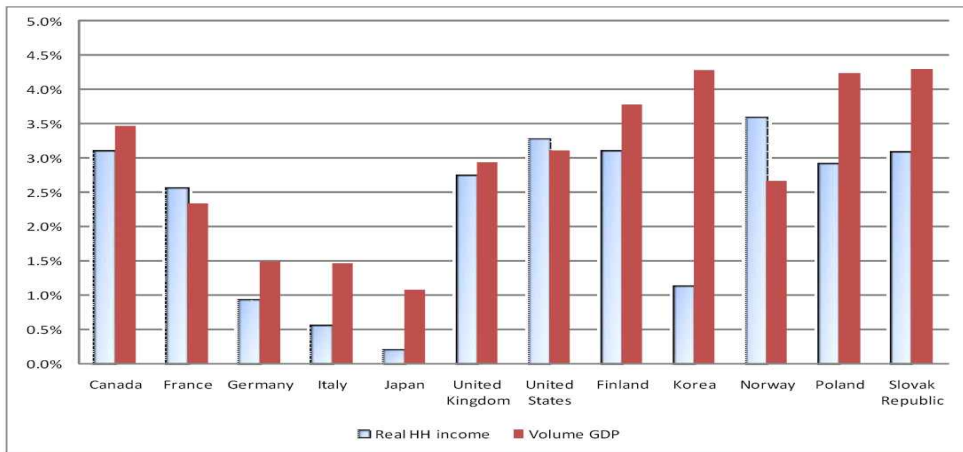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소득을 측정하는 세 가지 상이한 지표들의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률보다 가계소득이 체계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GDP는 평균적으로 4.7퍼센트(2004.1q~2008.3q) 증가했지만, GNI는 3.2퍼센트, 가계소득은 2.2퍼센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는 GDP보다 GNI가 그나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GDP란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1년 또는 분기)에 생산되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다.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하면, $GDP = \text{민간소비} + \text{투자} + \text{정부소비} + (\text{수출} - \text{수입})$ 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실질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감소하므로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실질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실을 차감을 반영해야 하고 이러한 지표가 바로 국내총소득(GDI)이다.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여 산출한 것이 국민총소득(GNI)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GDP가 GNI보다 체계적으로 작은 것은, 주로 교역조건의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GDP와 가계소득 증가율이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아래 그림은 지난 10년 동안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가계소득-세금을 비롯한 비소비지출)과 실질 GDP 증가율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12개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1퍼센트 남짓 증가하는데 그쳤다.

Figure 7: Real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GDP
Percentage growth at annual rate, 1996-2006



www.stiglitz-sen-fitoussi.fr

이렇게 된 데는 우선, 명목 GDP와 가계소득을 실질지수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디플레이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인데, 96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3.8퍼센트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2.76퍼센트로 1퍼센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만으로 3퍼센트가 넘는 차이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GDP와 GNI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며 GNI에 포함되지만 가계의 실질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의 부문 간 이전에서 오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계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정부에 납부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정부로부터 이전소득을 받는다. 또한, 가계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의 형태로 재산소득을 받으며,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은행에 이자를 지불한다. 이러한 부문 간 이전을 최종적으로 고려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따라서 97년부터 도입된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료와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지출이 늘어난 것도 주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GDP와 가계소득이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소득은 매월 9,000여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은 표본조사에 응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따라서 양극화가 극심할수록 GDP와 가계소득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세금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은 포함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인프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GDP로는 가늠할 수 없는, 물질적 복지 및 소비능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3.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을 위한 위원회’

2008년 2월, 현재 통용되고 있는 GDP 통계가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프랑스 정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센 교수를 주축으로 ‘경제성과와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년이 넘는 연구와 논의 끝에 지난 9월,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일명 ‘스티글리츠 보고서’ (www.stiglitz-sen-fitoussi.fr/documents/rapport_anglais.pdf)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또한, 이번 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스티글리츠 교수가 직접 참여하여 ‘행복(well-being) GDP’ 도입의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위원회는 ‘GDP’,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등 세 가지 주제로 기존의 GDP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00여 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 및 권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에서 질로의 전환 혹은 보완이다. GDP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량’의 총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품의 품질 증가에 따른 실질 소득 또는 소비의 증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 개선에 따라 가격이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통계 처리 과정에서 가격 변화를 조정하게 되는데, 물가 상승을 과대평가하면 품질개선(과 실질소득 증가)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만 포괄하므로, 정부나 가계에서 수행하는 비시장 영역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가계에서 수행하는 부모의 가사 및 육아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이라 하더라도 가사 및 아이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GDP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계 및 정부의 경제 활동이 시장 거래로 전환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체계적으로 GDP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생산’보다는 인간의 ‘행복’으로 강조점의 전환이다. GDP는 시장의 생산량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구성원이 체감하는 물질적 ‘복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GDP보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GDP에서 교역조건과 국가 간 소득 이전을 차감한 GNI, 더 나아가 자본재의 감가상각과 부문 간 이전을 고려한 NNDI(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GDP와 가계소득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을 중시한다. 따라서 물질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에서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고려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셋째, 분배를 통한 평균 지표의 보완이다. 평균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층 간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물질적 후생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 개념의 소득, 소비보다는 중간(median) 지표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재산의 변화, 계층별 소득 분배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도 밝히고 있다.

넷째, 행복은 물질적 생활수준의 일차원적 지표가 아님을 강조한다. 즉 새로운 대안 지표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은 GDP라는 객관적 지표에서는 포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역량(capability)’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HDI(인간개발지수)는 이번 위원회에 자문으로 참여하는 아마티아 셴 교수의 ‘역량’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역량’이란 행위자의 목적 · 지향 · 가치 등을 실제로 수행 또는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개발’이란 객관적 물질 조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능력’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약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GDP’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효용의 극대화로 보는데 비해, ‘역량’ 관점은 자신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역량을 강조하는 차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보고서는 보건, 교육, 환경 등 여러 상이한 영역의 측정을 모두 포괄하는 HDI와 같은 복합지수의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체감하는 행복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강조다. GDP는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더욱 더 많이 소모할수록, 그리고 환경을 더 심각하게 파괴할수록 늘어나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미래세대,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원과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물질적 복지가 미래에도 유지 가능한지를 측정하며, 규범적 선택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지수로 환원할 수는 없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차를 운전할 때 현재의 속도와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동일 계기판에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환경 문제로 인한 온난화와 수자원 고갈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위험지수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현재 위원회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정부의 주도하에 위원회를 설립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GDP 대체지표 개발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2007년 11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센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이미, UNDP에서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하여 실제로 매년 발표하여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실제로 대안적 GDP 지표를 개발하여 실험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물론 객관적 물질지표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은 새로운 대안지표 개발에 학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저항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가 세계은행 부총재로 재직할 당시, 세계화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것처럼, 보고서가 제기한 핵심문제와 권고사항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이번 달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7일에 방한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글로벌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8.15 경축사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적인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여전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등 국민의 '행복'과는 전혀 딴 방향의 정책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수십 조 원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에는 엄청난 건설 장비와 자재,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GDP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과 기회는 수없이 많다. 이미 파탄 난 747 공약인가, 아니면 국민의 행복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물론 정부의 몫이자 선택이다. 그러나 정치란 국민의 '행복' 증진이고, 통계란 그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

시 새겼으면 한다.

